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
-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날 키포프 회의를 주재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2-2110-1538)
공동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우석 (044-202-6360)
	인공지능안전신뢰과	담당자	전문관	박선례 (044-202-6368)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김진주 (02-2100-7281)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지영서 (02-2100-7138)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2110-3547)
	형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임현채 (02-2110-3545)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김성벽 (02-2100-6161)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오현승 (02-2100-6162)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2970)
	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02-2100-2975)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순국 (044-200-4405)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손은정 (044-200-44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팀 장	(공석)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티팀	담당자	사무관	정진아 (02-2100-3073)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팀 장	박영민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최경식 (043-719-1902)
경찰청	책임자	총 경	이동환 (02-3150-2041)	
치안인공지능정책과	담당자	경 정	이치화 (02-3150-1419)	

